

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(안)

목 차

- I. 글로벌 경제 및 건설산업의 **New Normal**
- II.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전망과 **10대 이슈**
- III. **2기**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(안)
- IV. 선진화 추진기구와 방법
- V. 맺음말

2010. 4. 28.

이 상 호



□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“New Normal”에 직면

- 이번 경제위기는 “주변부의 위기가 아닌 중심부의 위기” (Mohamed El-Erian, PIMCO) →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**New Normal**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현실 대두

※ **New Normal**: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표준이 일상화되면서 향후 5~10년간 글로벌 경제를 특징짓는 현상

Old Normal

고성장	- '03~'07 연평균 4.7% 성장
레버리지 및 위험투자 확대	- 글로벌 과잉유동성과 IB 등 금융권의 공격적 투자확대
초과수요/공급부족	- 수요견인형 고성장세 지속
G7 주도	- 미국·EU 등 선진국 주도 Globalization
Global Imbalance	- 무역적자국 vs. 무역흑자국
단일 기축통화	- 달러화 기축통화체제
시장기능 중시	- 민간주도 성장, 규제완화 등

New Normal

저성장/고실업	- 소비 및 투자수요 부진 → 저성장 (3~4%) → 고실업
De-leveraging/ 금융규제 강화	- 미국 등 저축 증대/소비축소 - IB 위축 및 금융규제 강화
수요위축/공급과잉	- 저성장/고실업 → 수요위축 - 상당기간 재고조정 불가피
G20 주도	- 중국·인도 등 신흥국 위상 강화(Asia Momentum)
Global Rebalance	-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시정
복수 기축통화	- 달러화 가치 하락 → 위안화 등 복수 기축통화체제 부상
정부역할 강화	- 글로벌 경기부양 및 출구전략 공조와 시장규제/감독 강화

□ 글로벌 경제와 마찬가지로 건설산업도 경제위기 이후 과거와 다른 **New Normal**에 직면

- 국내 건설시장 성장세 위축 및 수요위축/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필요
- 출구전략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사업 축소에 대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

Old Normal

건설시장 성장	- 글로벌 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4% 상회('03-'08) - 건축시장은 2.9%('03-'08) - 지역별/부문별 성장세 지속
레버리지 확대/ 부동산 버블형성	- 과잉유동성 / 레버리지로 건설수요 확대 → 버블 형성
초과수요/공급부족	- 부동산 가격상승 → 수요 지속 → 공급 부족
High-End Market	- 초고층 / 고분양가 등 Luxury Building /Apt. 공급 확대
재정사업으로 건설경기 조절	- 민간건설경기 위축시 SOC 재정투자 확대 등 지원
민간기업 주도	- 민간기업 주도로 국내외 건축 및 개발사업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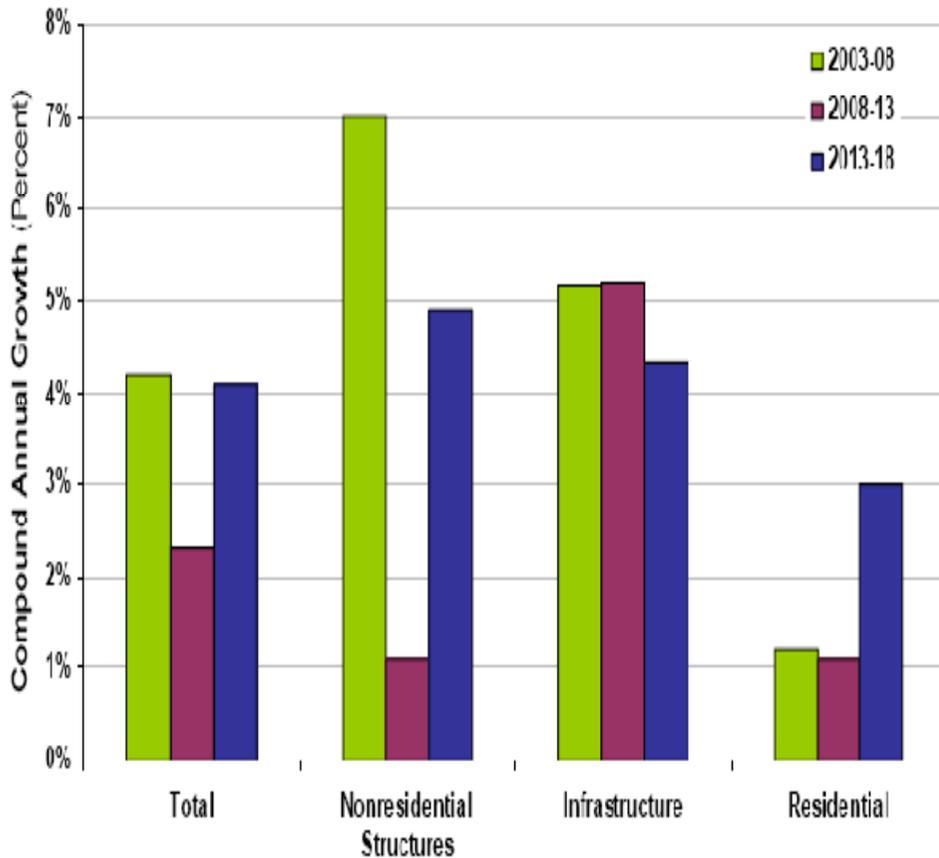
New Normal

건설시장 정체	- 글로벌 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2.2% 전망('08-'13) - 건축시장은 0.9%('08-'13)
신흥시장 지속 성장	- 미국·EU·일본시장 위축·정체 - 중동·중국·인도·동남아·중남미 등 신흥시장 성장세 지속
Deleveraging/ 부동산 재고조정	- 가계부채 축소, 위험 회피 - 부동산 가격하락 내지 정체 → 재고조정 장기화('13)
수요위축/공급과잉	- 저성장/고실업/ Deleveraging - Time Lag 으로 인한 공급과잉
Low-End/ Local Market	- High-End 시장 위축 - Low Cost Construction 중요
재정사업 위축	- 재정건전성 확보 → 재정사업 축소 →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
민-관 협력강화	- 녹색건설시장 개척/활성화 - G20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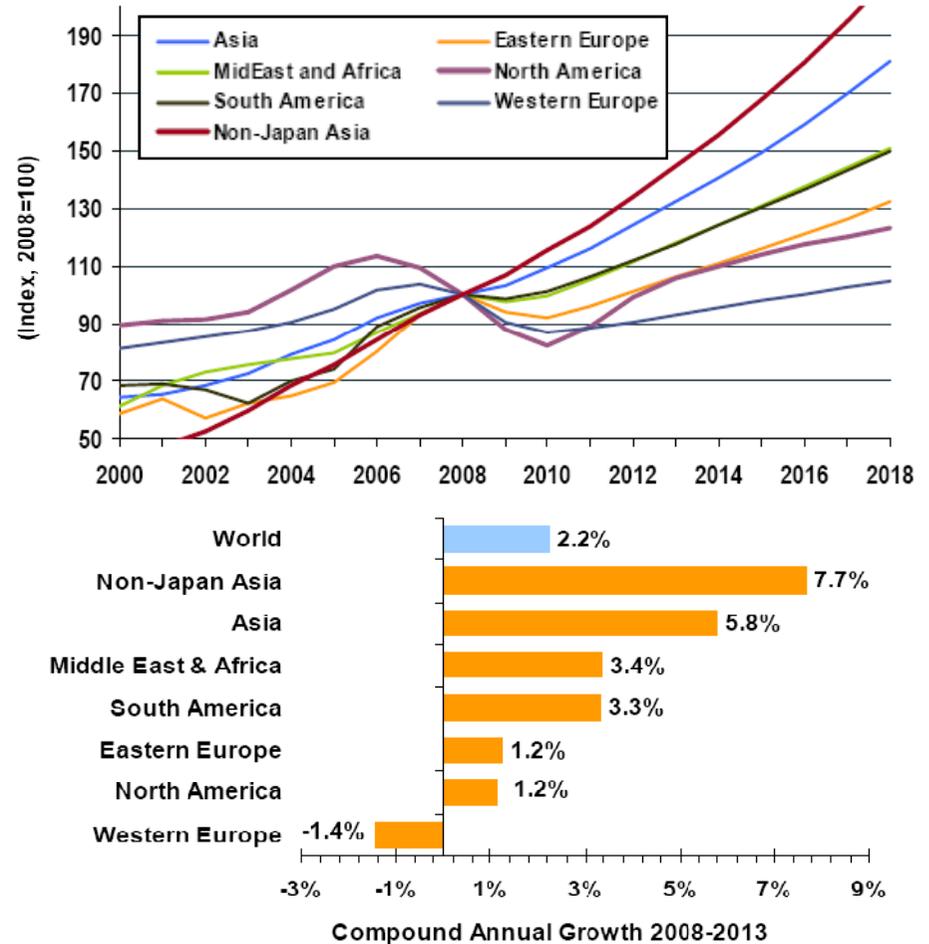
□ '03~'08년간 4%를 상회하던 글로벌 건설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'08~'13년간 2%대로 하락 전망

- 건축시장은 상당기간('08~'13) 재고조정 예상, 인프라시장이 세계건설시장 성장 주도 전망
- 미국/EU/일본 등 선진국 시장과 달리 신흥시장(특히 중국·인도 등 아시아 시장)은 성장세 지속 전망

세계 건설시장 부문별 성장률 전망



지역별 세계건설시장 성장추이와 전망



자료: Global Insight(2009)

II.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전망과 10대 이슈

2. 국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, 실업률 회복 지연

□ 재정투자 확대, 저금리,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'09년 0.2%성장('10년 5.2% 성장 전망, 한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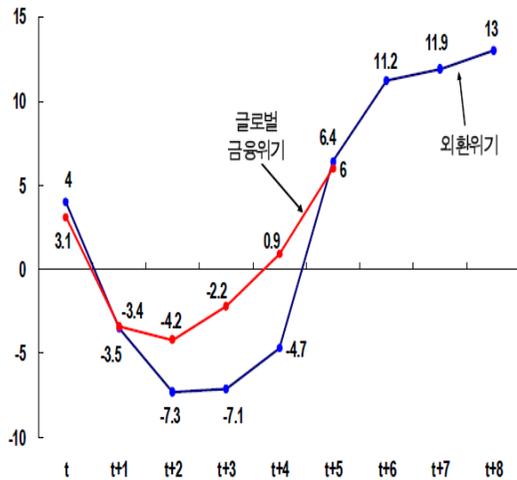
- IMF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하락 폭이 작았고, 조기 회복 → 미국/EU/중국 등 대외 불안 요인 여전
- 실업률 추이(통계청, '10.4): 3.5%('09.12) → 5.0%('10.1) → 4.9%('10.2) → 4.1%('10.3)

국내 주요 기관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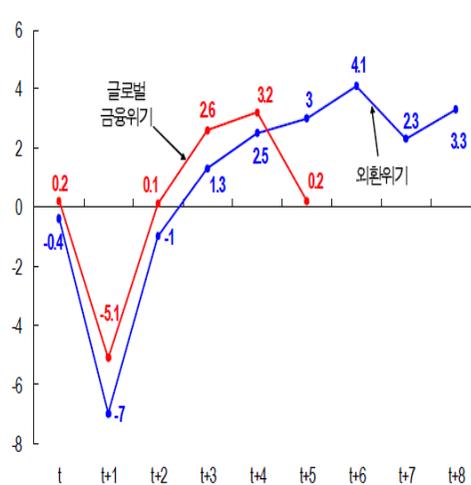
정부/공공기관			민간기관		
기획재정부 ('09.12)	한국은행 ('10.4)	한국개발연구원 ('09.11)	삼성경제연구소 ('10.3)	LG경제연구원 ('09.12)	한국경제연구원 ('09.12)
5.0%	5.2%	5.5%	4.3%	4.6%	4.2%

경제회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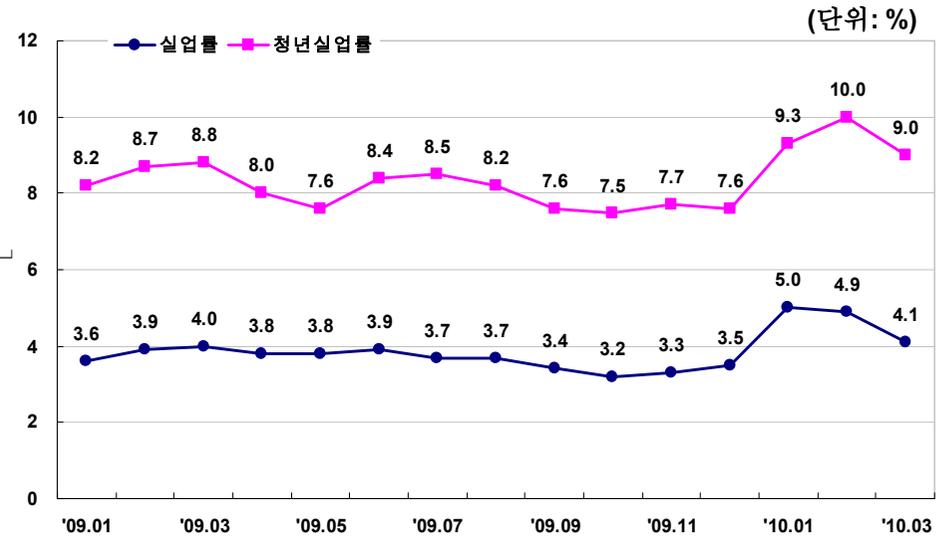
< 전년 동기 대비 >



< 전기 대비 >



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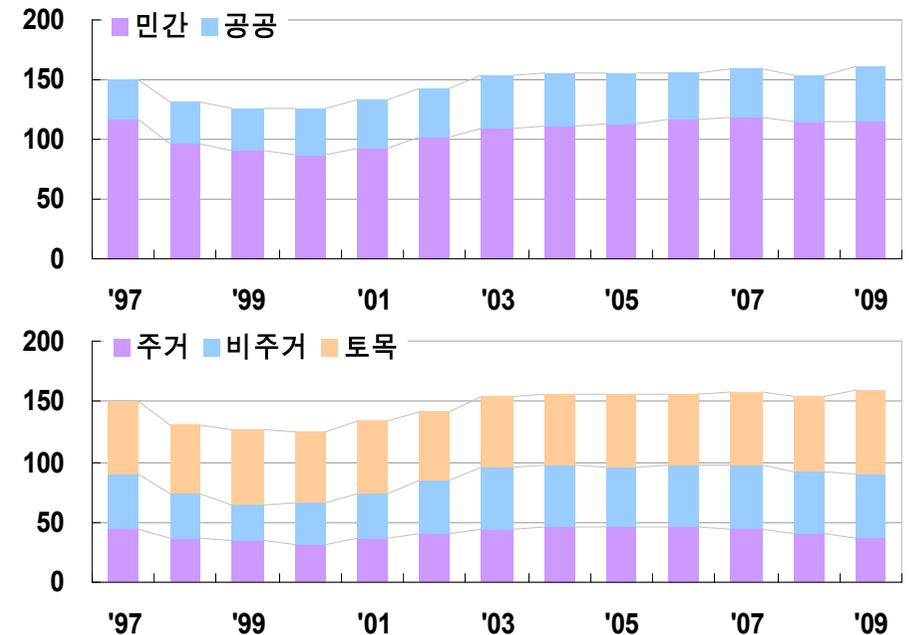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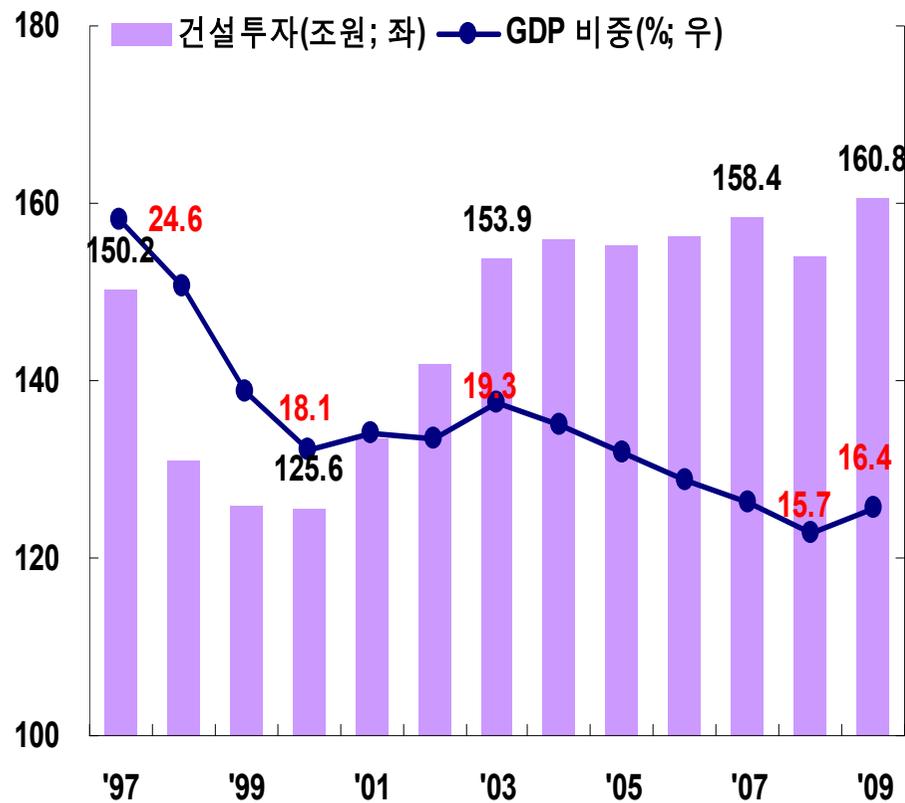
*t는 위기발생 시점으로 외환위기는 ' 97년 4/4분기, 글로벌 금융위기는 ' 08년 3/4분기임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(2010.3)

□ 건설투자는 '03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 후 155조원 내외 규모 유지 → 향후 160조원대 정체 전망

- GDP 대비 비중 지속 감소: '90년대 25% 수준 → 16% 수준 대폭 감소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('08-'09년) 공공/토목 부문 확대 vs. 민간/주거 부문 축소

국내 건설투자 추이

(단위: 조원)



- 민간 115조원 내외 / 공공 40조원 내외 규모 유지 (외환위기 및 회복기('98-'02년) 제외)
- 토목 60조원 내외 규모 유지 → '09년 70조원 돌파
- 주거 부문 '00년대 중반 45조원 내외 → '09년 38조원 축소

주: 2005년 불변가격

자료: 한국은행 ECOS D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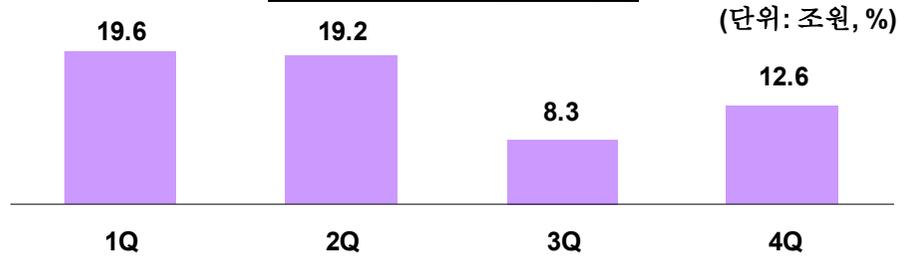
□ 정부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**4.2%** 이지만, **SOC투자 증가율은 2.0%**로 계획('09-'13)

- SOC 예산이 총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

□ 2012년 내지 2013년까지는 건설투자 정체 전망 (큰 폭의 하락은 없다는 의미)

- 4대강 사업, 30대 선도 프로젝트, 2기 신도시, 혁신도시, 보금자리주택공급 등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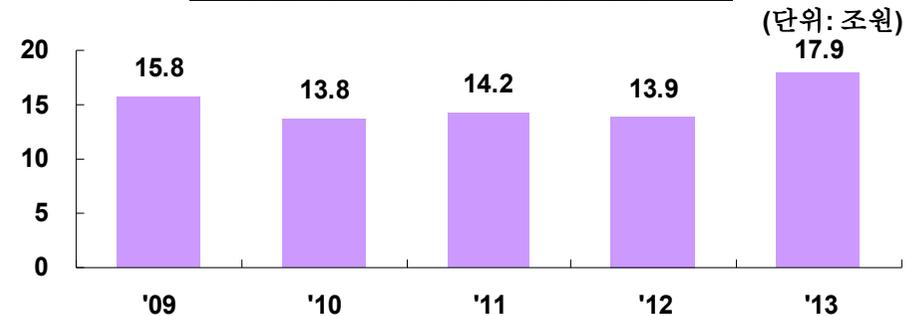
2010년 SOC 집행계획



중기재정계획

구분	'09	'10	'11	'12	'13
재정지출	284.5	291.8	306.6	322.0	335.3
SOC	24.7	24.8	25.3	25.9	26.7
비중	8.7	8.5	8.3	8.0	8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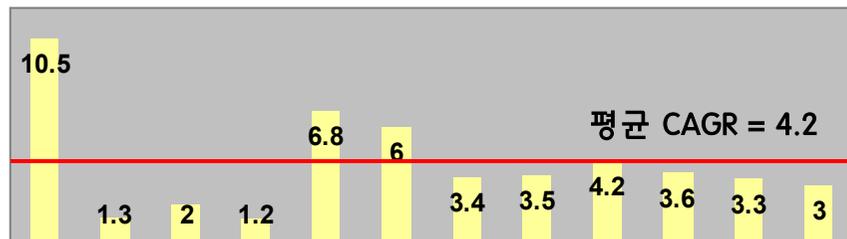
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재정소요



주요 국책사업 투자계획

구분	합계	'09	'10	'11	'12	'13
녹색뉴딜 (민자)	33.3 (7.0)	3.4 (1.3)	9.8 (2.1)	11.9 (2.1)	8.3 (1.5)	-
30대 선도프로젝트	50	3.6	3.4	미확정		
세종시 (민자)	22.5 (4.5)	4조원 기 집행 / 수정안 26조원				
보금자리주택	29 (60만)	6.2 (13만)	8.8 (18만)	약 14조원 (29만호)		

*녹색뉴딜: 4대강 사업 15.4조원 포함



R&D 산업 SOC 농수산 보건 교육 문화 환경 국방 통일 공공 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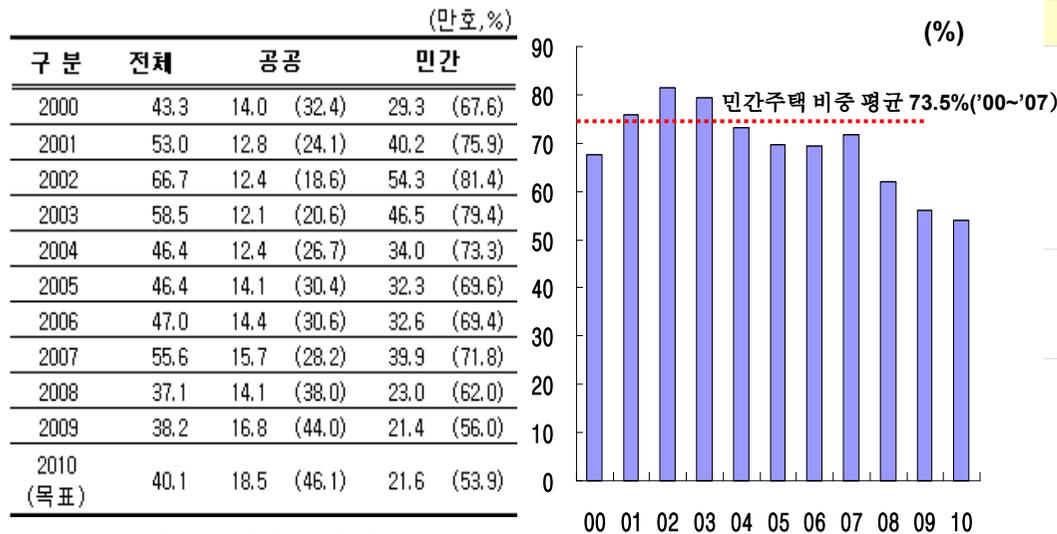
자료: 기획재정부, 국회예산정책처, 국무총리실, 국토해양부

- 2기 신도시 공급계획(약 57.5만호)과 '09년부터 150만호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공급 계획 추진 중
 - '09~'12년간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서만 32만호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(연간 8만호)
 - 공공주택 공급비중 확대(민간주택시장 위축): '00년 14.0만호(32.4%) → '10년 18.5만호(46.1%)

2기 신도시 분양실적 / 계획

구분	합계	'08년 이전	'09	'10	'11	'12	'13년 이후
분양(천호)	575	77	39	82	125	115	184

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 추이



주: ()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

자료: 국토해양부, 한국은행(2010.4)

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

지역	택지유형별 공급방안
수도권 (100만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심 20만호(재건축, 재개발, 역세권 등) • 도시근교 30만호(개발제한구역 해제 등) *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
지방 (50만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시외곽 50만호(신도시 등 택지개발) • 택지개발 50만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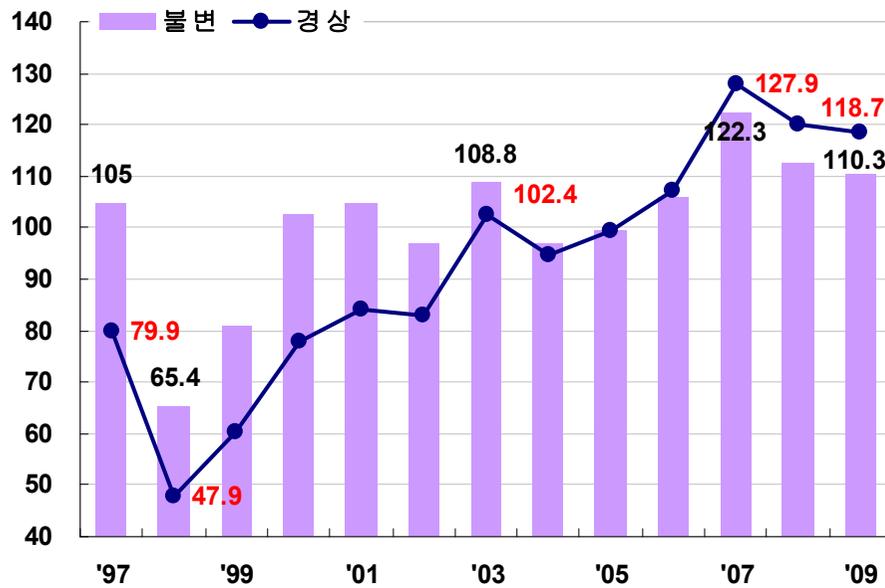
수도권 GB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기 / 확대 공급

- 당초: '09~'18년 30만호 공급(연간 3만호)
- 변경: '09~'12년 32만호 공급(연간 8만호)
- * 민간 분양 10만호 별도

□ 국내 건설수주는 '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, 경기부양 정책으로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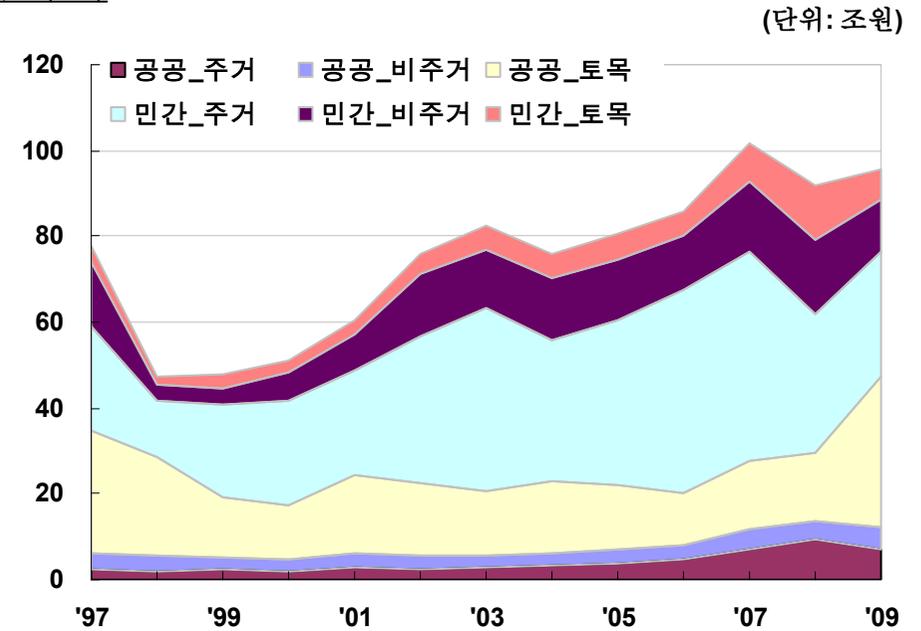
- 공공 주거 확대 추세 / 공공 토목 '09년 급증
- 민간 주거 '07년 정점 후 급감 / 기타 부문 상대적으로 안정적

국내 건설수주 추이



주: 2005년 불변가격

- 건설수주 '07년 128조원 기록 후 감소
- 외환위기 대비 감소 폭 상대적 완만
- *정부의 선제적 경기부양책 효과



- 공공 주거 확대 / 공공 토목 '09년 급증
- 민간 주거 '07년 정점 후 급감
- 민간 비주거/토목 부문 일정 규모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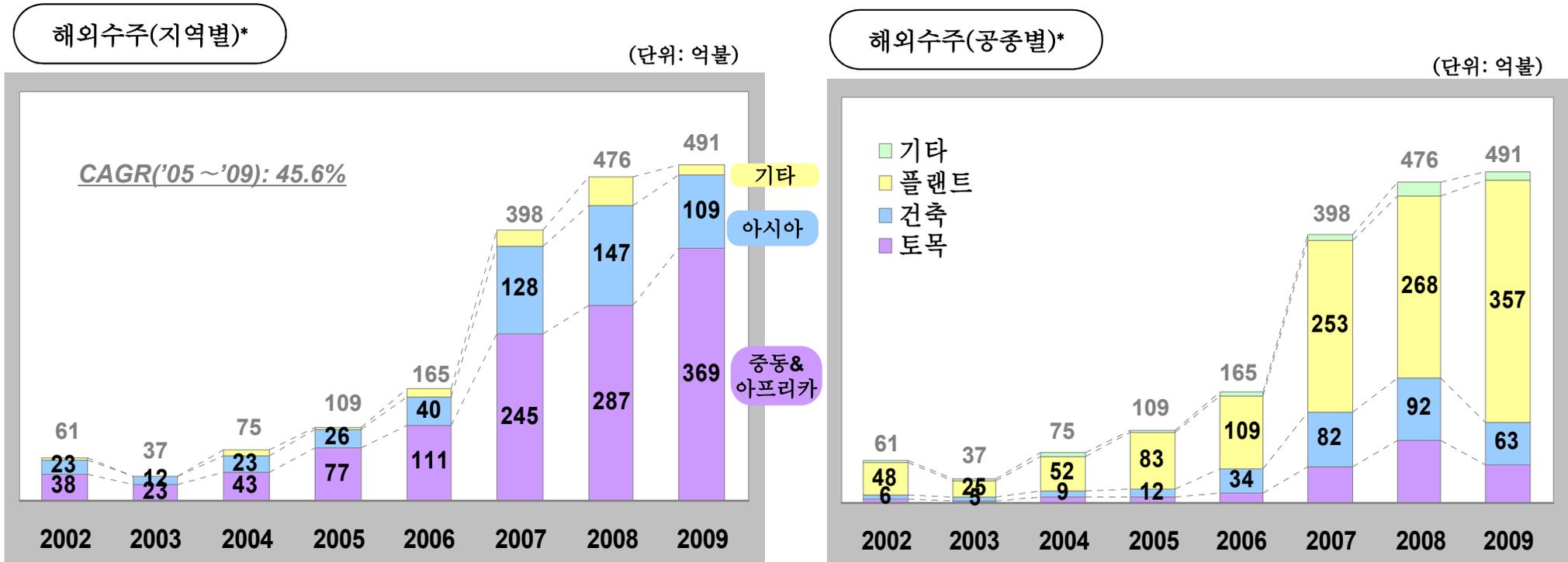
□ '09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491억불로 사상 최고치 기록

- 중동(72.7%) 및 플랜트(72.6%) 수주편중 심화 vs. 토목(11.7%), 건축(12.8%) 수주 비중 저하

□ '10년 해외건설 수주전망은 740억불(해외건설협회 집계)

- '10.4.21 현재 UAE 원전 수주 등을 포함 313억불 수주
- 국내 건설시장 위축과 글로벌 경제회복 가시화로 우리 정부 및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노력 강화
-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중동 및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

지역별/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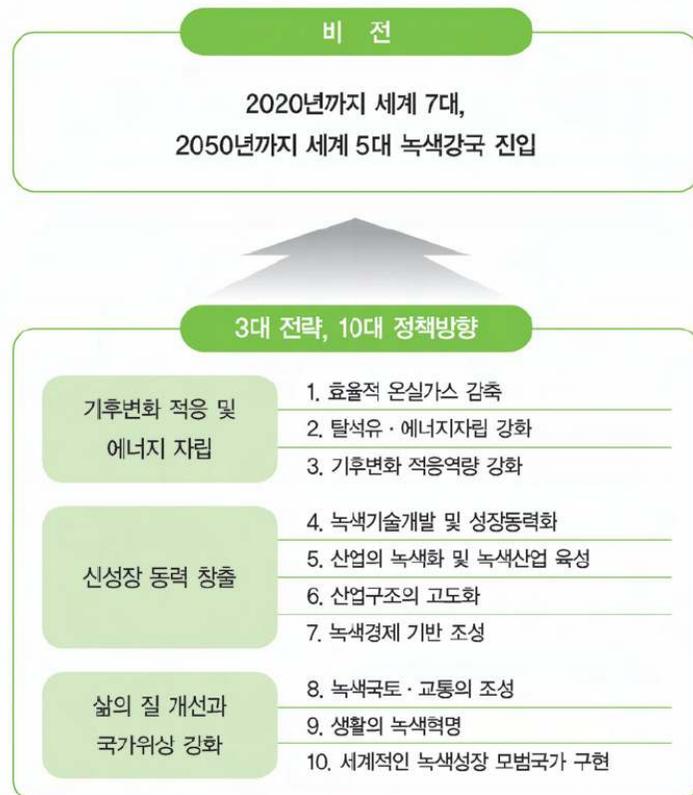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해외건설협회

□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본격화와 녹색건설시장 성장

- '09~'13년간 총 107조원 투자계획(매년 GDP의 약 2% 수준)
- '10년 이후 그린홈/빌딩/시티 및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녹색건설시장 성장 본격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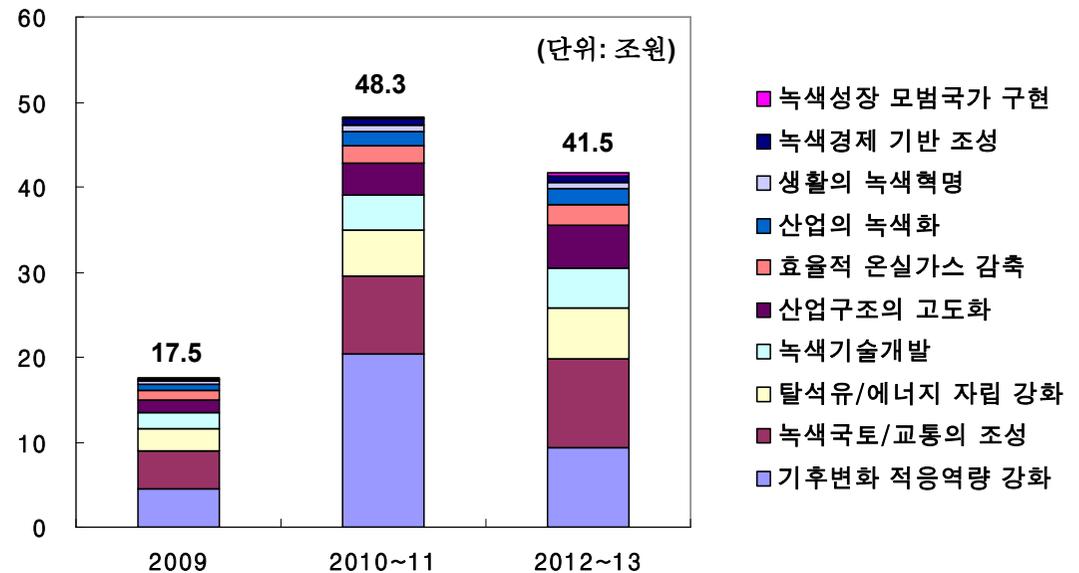
녹색성장 국가전략 개요



- 저탄소 녹색성장 최상위 국가계획
- '09~'13년 연도별 실행방안 제시

자료: 녹색성장위원회

연도별 재정투자계획('09~'13)



- '09~'13년간 총 107조원 투자계획
- 매년 GDP의 약 2% 수준
- 기후변화 적응, 녹색국토/교통 조성, 탈석유/에너지 자립 등 3대 과제가 총 투자비의 66% 차지 (4대강, 저탄소 교통망, 그린홈, 원자력 발전 중심 전개)

□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

- 분양공사의 매출액 인식기준, 자체사업과 지주공동사업 구분 등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도입방안 논의 필요
- IFRS가 적용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등 건설업체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건설제도 개편 검토

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 로드맵

구 분	주 요 내 용		
①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	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하고,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선택 적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 - 선택적용(2009년): 희망기업(금융회사 제외) - 의무적용(2011년): 모든 상장기업		
② 분·반기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기		적용시기	분·반기 연결재무제표
	1단계	2009년	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
	2단계	2011년	자산2조원 이상
	3단계	2013년	모든 상장기업
③ 연결범위	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		
④ 비재무적 사항 연결공시	사업보고서 등의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 -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합병·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해 공시		
⑤ 비상장기업용 회계기준 운용	비상장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별도의 간명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 (2011년부터 적용)		
⑥ K-IFRS 제정	2007년 하반기까지 제정업무 완료		

자료 : 금융감독원

IFRS 도입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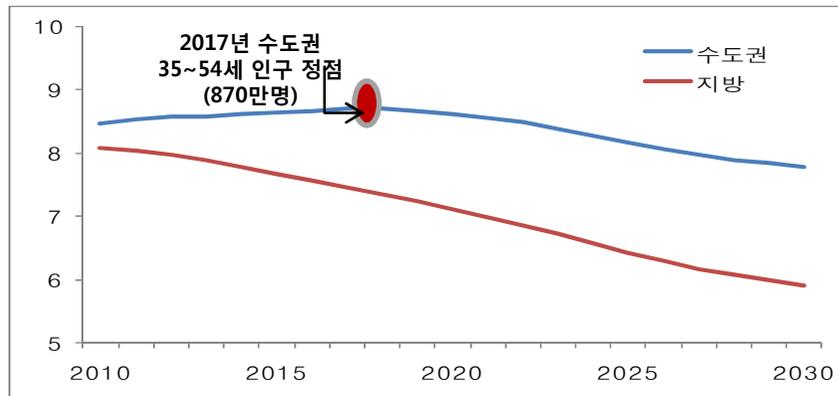
분 류	현행 GAAP	IFRS 도입에 따른 신규회계처리기준	
		IFRS 적용기업 (상장기업)	비적용기업 (비상장기업)
1. 분양공사의 매출액 인식기준	- 진행률 기준	- 인도 기준	- 진행률 기준
2. PF사업의 우발 부채 산정기준	- 부채 전환 가능성이 80% 이상인 경우 부채로 계상	- 부채 전환 가능성이 50% 이상인 경우 부채로 계상	- 부채 전환 가능성이 80% 이상인 경우 부채로 계상
3. 임대주택의 회계처리	- 금융리스로 계상되 건설사의 부채로 미계상	- 리스자산(금융리스, 운용리스) 모두 부채로 계상	- '10년 하반기 결정 예정
	- 금융리스: 임차인(입주자)의 부채로 인식 - 운용리스: 임대인(건설사)의 부채로 인식		
4. 재정사업	- 진행률 기준	- 진행률 기준	- 진행률 기준
5. 법인세법의 처리방향	- 현행 법인세법 적용	- 결정된 바 없음	- 현행 법인세법 적용

자료 : 대한건설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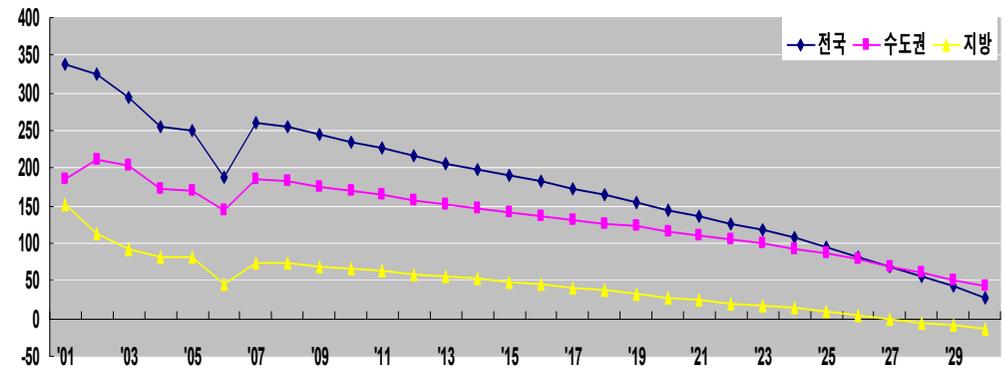
□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, 가구 증가율 둔화,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중장기 건설수요 위축 전망

- 주된 주택수요층인 핵심생산인력(35~54)은 2011년부터 감소(수도권은 2017년부터 감소)
-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중장기 건설 및 주택정책 수립과 건설업체의 대응전략 모색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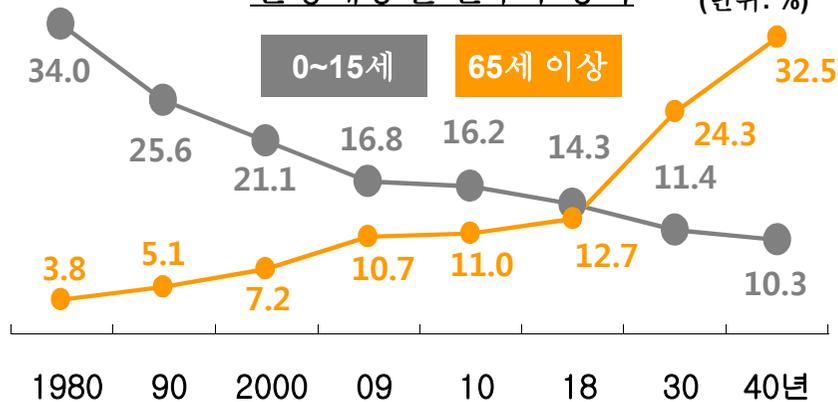
핵심생산인력(35~54세) 변화 전망 (단위: 백만명)



가구 증감 추이



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, 신한FSB연구소(2010.4)

총가구, 1인 가구수와 비중 (단위: 만가구, %)

구분	2000	2005	2010	2020	2030
총가구 (A)	1,451	1,597	1,715	1,901	1,987
1인가구 (B)	226	319	347	411	471
비중 (B/A)	15.6	20.0	20.2	21.6	23.7

자료: 통계청, 장래가구추계.

주: 2000년과 2005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며, 이후 가구수는 추계된 것임.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**New Normal**에 대비, 건설산업의 지속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과제발굴 필요
 -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및 국제회계기준(**IFRS**) 도입 등에 따른 건설금융 및 회계제도 선진화가 시급한 과제
 - 중장기적으로는 1기 선진화 방안의 3대 목표중 하나로 제시했던 해외건설 수주 **2,000억불** 시대를 열고, 녹색건설 시장 활성화 및 건설선진국이 되기 위한 인력양성, 기술력 확보 등 지속성장 기반 구축 중요

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10대 이슈와 선진화 과제(안) 개관

- 1 세계건설시장은 저성장, 신흥시장은 지속 성장
- 2 국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, 실업률 회복 지연
- 3 국내 건설투자 **160조원대**에서 정체
- 4 정부재정사업 및 SOC투자 비중 저하
- 5 공공주택 공급비중 확대 및 민간주택시장 위축
- 6 **2007년 이후** 국내 건설수주 감소세
- 7 해외건설 수주 확대
- 8 녹색건설시장 성장 본격화
- 9 국제회계기준(**IFRS**) 도입과 건설회계제도 변화
- 10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수요 위축



-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조달정책 혁신
- 건설금융 및 회계제도 선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
- 해외건설 수주 연간 **2,000억불**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혁신과 지원
- 공공부문의 선도를 통한 녹색건설시장 활성화
- 건설선진국이 되기 위한 지속성장기반 조성

□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정책 혁신방안 수립

-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대 곤란(향후 재정사업 축소 등 불가피)
→ 정부조달정책과 제도혁신을 통해 건설기술 및 기능인력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,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며, 대·중소기업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건설기술인력제도 및 용역업체 선정제도 개편

- 토목/건축학과를 졸업한 젊은 인력의 취업난
→ 건설기술인력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으로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확대
- 기술사제도, PQ제도 개편 등

가격경쟁에서 기술·품질경쟁으로 정책방향 전환

- 정부조달시장에서 가격경쟁 확대 추세 심화
→ 예산절감 외에 고용·품질·안전 등 다양한 정책목표의 종합적인 최적화 필요
- 정부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전환

중소규모 공사 및 용역발주제도 개선

-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심각 → 일자리 창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건설업체 지원 방안 강구
- 직접시공제도 적용 확대, 중소규모 공사 및 용역발주제도 개편 등

수평적 협력체계로 건설생산체계 개편

- 건설업 면허제도, 하도급제도 등에 기초한 수직적 생산체계는 비효율성과 불법·탈법 행위 유발 → 수평적 협력체계로 전환
-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 검토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규제 및 투자은행(IB) 변화에 따른 건설금융 위상 정립 필요
 - '10년 하반기 이후 민간투자 활성화 중요 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사실상 중단된 공모형 PF 사업 및 SOC민간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방안 강구
 - 2011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(IFRS)에 따른 건설회계의 선진화도 당면 현안과제

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에 따른 건설제도 선진화

- '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IFRS 적용 → 건설업 특성반영 및 관련 건설제도 개편
 - 건설업 특성 반영 여부 검토
 - 시공능력평가제도, PQ경영평가제도 등 개선 검토

공모형 PF제도 개선과 위상 정립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조원이 넘는 공모형 PF사업 정체 내지 유찰사태 빈발 → “선택과 집중” 원칙 아래 공모형PF사업의 정상적 추진방안 마련
 -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제도개선 검토

SOC민간투자제도 개선과 위상 정립

- '10년 상반기중 비상경제체제 종료시 재정사업 축소 → SOC민간투자 활성화 필요
 - SOC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신 해소 중요
 - 한국 민간투자제도 수출 및 해외민자시장 진출 확대 노력 병행

부동산 PF제도 개선

- 미분양 주택 누적 등으로 부동산 PF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고조 → 시공사 지급보증을 전제로 하는 현행 부동산PF 사업구조 선진화
 - 사업 참여자간 합리적 리스크 배분 방안 등 검토

□ 국내 건설시장 위축에 대비하여 해외건설 수주 **2,000**억불 시대를 열기 위한 민-관 협력 중요

- 중동/플랜트시장 외에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신흥시장 토목/건축/개발시장 진출 확대 추진
-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, 인력 양성과 기술 및 금융역량 강화 추진
- 국내 건설 관련 법/제도/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해 국내경쟁력이 국제경쟁력이 될 수 있는 토대 구축

신흥시장 토목/건축/개발시장 진출 확대 추진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 토목/건축/개발시장 진출 확대 추진
 - 한국형 신도시 수출, (고속)철도시장 진출 등
 - 정부 건설외교 및 금융지원 강화 등

해외건설 인력, 기술 및 금융역량 강화

- 해외 플랜트 수주 급증으로 심각한 인력난, 소프트 경쟁력 취약, 파이낸싱 역량 부족 여전
 - 글로벌 건설인력 양성, 설계·엔지니어링 및 금융역량 강화 필요
 -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기 확충 등 추진

G20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

- 지식경제부 주도로 **G20(+30억 시장)** 진출확대 추진 → 건설업계도 적극 참여 필요
 - 타업종(무역업체 등)과의 협력 강화
 - 자원개발과 **SOC** 연계 등 신사업 발굴 확대

국내 건설 관련 법/제도/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

- 후진적인 국내 건설 법/제도/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추진
 - 설계·엔지니어링제도 선진화
 - 공공공사 발주 및 입낙찰제도 선진화
 - 건설보증·보험시장 선진화

□ 녹색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중요

- 주택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민간부문의 그린홈/빌딩/시티는 활성화 곤란
→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리모델링과 탄소제로 공공주택단지 건설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설시장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

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와 그린빌딩시장 활성화

-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성 전수 조사 →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단계적 리모델링 계획 수립
→ 리모델링 착수 및 민간으로 확대 추진
- 그린빌딩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
 - 탄소저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

U-Eco City 건설과 수출산업화

- 경제자유구역, 수도권 공모형 PF 사업지구, 도시정비 사업 등에서 U-Eco City 건설 확대
→ 신흥국 해외신도시 수출산업으로 육성

탄소제로 공공주택단지 건설/그린홈 시장 활성화

- 공공에서 주도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시범적으로 탄소제로 주택단지 조기 건설
 - 국가차원의 Smart Grid 구축과 연계한 Micro Grid 주택단지 건설 병행

세계최고수준의 녹색기술 및 금융역량 확보

- 녹색건설을 위한 설계·엔지니어링 역량 강화
- 녹색금융의 획기적 확충과 지원 강화
 -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녹색건설 투자 확대 유도

- 건설재해율의 획기적 축소, 법질서 확립, 글로벌 인력양성과 전략적 R&D 등 지속성장 기반 구축
 - 인구구조 변화, 남북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건설정책과 제도기반 구축

세계최고 수준의 건설재해율 축소와 안전 확보

- OECD국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설재해/안전수준의 획기적 향상 추진
-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난방지 및 건설안전시스템 주기적인 점검 강화
 - 재난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정립 등

투명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통한 부패척결

- 공공/민간을 가릴 것 없이 부정·부패가 심각한 산업이라는 이미지 확산 → 투명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없이는 선진화 기대 불가
-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과제 발굴 추진

세계적 수준의 건설인력 양성과 전략적 R&D

- 기술/기능인력 외에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등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의 역량 제고 추진
-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 R&D 추진 등

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건설/공공주택정책 수립

- 고령화, 저출산,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주택정책 방향 정립

남북통일을 대비한 국토개발전략 수립

- 국토이용계획을 한반도 공간 재창조 계획으로 확대하여 북한을 포함한 「국토 100년 설계구상안」 개발방안 제시 등

IV. 선진화 추진기구와 방법

-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연구단 구성 → 금년말까지 선진화 방안 확정 → 정책반영 추진
 - 국토해양부, 기획재정부, 조달청,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선진화 방안 논의과정에 참여
- 향후 「건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」 수립 및 민관합동기구로 「건설혁신센터」 설립 추진
 - 건설산업 선진화 작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강구

「건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」 수립과 추진

- 현행 “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”과 “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”을 “건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”으로 통합
 - 『(가칭) 건설산업통합법』 제정시 법정계획으로 수립 의무화
-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되,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범부처 차원의 계획으로 위상 정립(매 2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)
 - 계획수립 시점부터 관련 정부부처 참여
- 수립주체: 민관합동기구인 『건설혁신센터』

민관합동기구로 「건설혁신센터」 설립과 운영

- 향후 건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 설립 추진
 - 영국의 건설혁신기구인 **CE(Construction Excellence)** 등 벤치마킹
- 범정부·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혁신기구로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
 - 제도혁신: 지속적인 제도개선 안 제시
 - 문화혁신: 기업문화 등 건설문화 혁신
 - 성과혁신: 성과측정과 평가시스템 운영
 - 혁신 Hub 역할: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

V. 맺음말

- 1기 선진화 작업과는 기본방향, 과제의 내용 및 추진주체 등 차이
 - 공공건설사업비 절감(1기) →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지속성장 과제 발굴(2기)
- 지속성·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1기와 기본철학 및 방향성과 목표 등 공유
 - 1기 선진화 작업 참여자 다수 참여 및 연구단 구성 및 논의과정에서 산학연관 전문가 지속 보강

1기 선진화 작업과의 차이점

- 기본방향
 - 1기: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→ 공공건설사업 효율화
 - 2기: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환경변화 대응
- 과제의 내용
 - 1기: 발주제도를 비롯, 후진적인 국내 건설 법/제도의 선진화
 - 2기: 해외건설수주 2,000억불시대 개막, 녹색건설시장 활성화, 글로벌 건설인력 양성 등 대외지향적, 미래지향적 과제 중심
- 추진주체
 - 1기: 국토부 지원/선진화위원회 주도
 - 2기: 기재부, 권익위 등 참여 폭 확대

1기 선진화 작업과 기본철학 및 방향성 등 공유

- 지속성·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1기와 기본철학 및 방향성 공유
 -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과 정착
 - 공공발주기관 혁신 우선 등
- 1기 선진화 방안과 목표공유
 - 해외건설 수주 연간 2,000억불 달성
 -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
- 1기 선진화 작업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민간전문가 다수 참여
 - 녹색건설 등 새로운 과제 추가 및 연구 충실화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지속 보강